

# 불명확한 기준에 잇단 소송… “처벌보다 예방 인센티브”

두성산업, 위험법률심판 제정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경영계 “경영주 처벌 수단 전락”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험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의 위험요소를 들어 재판부에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에어컨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서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돼 직업성 질병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후 두성산업은 국내에서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화우 측은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1호’인 삼표산업은 올해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월간 사고 조사 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삼표산업의 경영주도 소환 조사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뒤이어 기소된 기업들도 줄지어 위험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두 해당 법의 명확성, 과잉금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위험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현행 중대재해법에 근거해 수사한 뒤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수사와 재판은 길어지면서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사례 한 건 없는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영세사업장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문화’ 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기소된 기업들의 위험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해 있어도 없는 법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령부터 바꾸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던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로 200만원씩 지급했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체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없을 시 안전 감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를 살리고, 노사가 자율 예방체계를 갖추려면 법령부터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에서 논란이 큰 만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다보스 13년 개근’ 김동관 한화 부회장

# 그린 에너지 허브 구축 앞장

태양광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에너지 인프라 기술, 글로벌 협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해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량과 새롭게 확보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술, 글로벌 협력을 통해 ‘그린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16~20일(현지 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및 태양광·풍력, 수소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잇달아 만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18일 미국 합작회사 설립 등 한화와 태양광 분야에서 협력 중인 토탈에너지의 빠뜨리크 뿌요네 CEO를 만나 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어 글로벌 풍력터빈 시장점유율 1위 덴마크 베스타스의 최고경영진을 만났다.

앞서 17일에는 미국 최대 재생 에너지

개발 기업인 AES의 안드레스 글루스키 CEO를 만나 탈탄소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AES는 최근 텍사스에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할 바 있다.

김 부회장은 LNG운반선 등 선박 700척을 운영하는 일본 MOL의 CEO 다케시 하시모토와도 만났다. 또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 에넬의 프란체스코 스타라체 CEO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2010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2013년에는 한화큐셀이 다보스 롱레스센터에 태양광 모듈을 기부했고, 2018년에는 한화가 후원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기념품을 증정하고, 더 플라자호텔 셰프들이 만든 한식을 글로벌 인사들에게 제공해 민간 홍보사절단 역할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김 부회장이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파견한 ‘다보스 특사단’에 참여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Electrification of Everything(모든 사물의 전기화)의 시대, LS는 새로운 비전 2030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인 전기로 빛 제로 시대를 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